

#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4월 2차



## 주요 현안



###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고,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오는 5.1.(일)부터 생리용품 신청 가능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1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0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08)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고,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

####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2.04.12.]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ldx=86&bcldx=1033001&parentSeq=1033001>

##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 발간

☑ **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언론 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마련하고,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등에 배포**

- 보도 참고 수첩은 최근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의 사항 등을 보완하여 소책자 형태로 제작
- 성희롱·성폭력 사건 기사의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및 법원의 판례를 보완하고, 2018년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서술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핵심 내용을 보다 압축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1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1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10)

##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전국 4,490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 8,726명 중 8,358명 응답, 응답률 95.8%)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됐으나 여성이 가사·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남녀 모두 ‘여성폭력이 심각하다’에 동의 비율이 높았고, 청년층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성차별 등 문제 심각성에 공감
-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분배,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 강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1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1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19)

##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여성가족부는 5개 중앙행정기관과 1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총 1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실시**

-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기초·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계획 수립 자문 등을 지원하며 2022년 2월부터 전체 기초 지자체 및 양성평등 전담부서 운영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참여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총 121개의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 규모 크게 확대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2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2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22)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익의원 등 12인)	2022-04-12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2022-04-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안 제4조제8항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8인)	2022-04-14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내실화하고 육아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안 제26조제1항제4호, 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37조제2항제4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2022-04-2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 진행(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37조)
여성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4-13	현행법상 사업주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차별 및 모집·채용 시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에 병력을 명시하여 이로 인한 차별 근절(안 제2조제1호·제7조 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4-13	현행법상 사업주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차별 및 모집·채용 시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에 병력을 명시하여 이로 인한 차별 근절(안 제2조제1호·제7조 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4-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간 임금차별의 해소 도모(안 제8조제4항)

젠더폭력·안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2022-04-13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 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4-13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안 제5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2022-04-14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시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한 심문 과정은 원칙적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참여했을 경우,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피해자 등이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 변호인의 요구에 따른 반복회고와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문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 등이 공간적 안전과 심리정서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의 선임 및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의무화해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27조, 제30조, 제37조 및 제4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2022-04-14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안 제25조의2 제1항제1호의2 신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4-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2-04-15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개정(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2022-04-15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이동편의 증진(안 제18조 신설)

젠더폭력· 안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2-04-19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스톱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 및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스톱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증진 보장(안 제1조,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5인)	2022-04-20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 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 명령 제도,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신속하고 영구적 삭제를 위한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대책 마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의원 등 11인)	2022-04-20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 도모(안 제43조제5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2인)	2022-04-20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개정(안 제33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0인)	2022-04-20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개정(안 제34조)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2인)	2022-04-20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개정(안 제25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1인)	2022-04-20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법원, 검사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안 제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2인)	2022-04-20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군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안 제49조의2)

젠더폭력·안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2022-04-22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10세 이상인 자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 및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서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안 제9조).
법·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4-13	현행법의 용어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명, 제10조의2 신설 등)

보도자료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4.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재 양성평등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양성평등 정책의 주요 분야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원 39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9627>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연구	4.13	경향신문	임신중지 문의하자 “인터넷 검색해보라”는 정부 상담센터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31034001">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31034001</a>
[개원 39주년 기념 세미나]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전망과 과제	4.19	여성신문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 이대로 괜찮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 개최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82">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82</a>
	4.20	KBS	국민 71% “젠더갈등 심각”...“새 정부 성평등정책 못할 것” 48%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4703&amp;ref=A">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4703&amp;ref=A</a>
		MBC	국민 71% “한국 사회 젠더갈등 심각”..48% “새 정부 성평등정책 못할 것”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1110_35673.html">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1110_35673.html</a>
		연합뉴스	국민 71% “젠더갈등 심각”...48% “새 정부 성평등정책 못할 것”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086200530?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086200530?input=1195m</a>
		뉴스1	“디지털 젠더폭력 등장…女폭력, 사후 처벌 강화만으로 한계”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654636">https://www.news1.kr/articles/?4654636</a>
		뉴스시스	20대 여성 85% “尹, 성평등정책 잘 못할 것”...공정평가 3% 뿐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0_0001841241&amp;clID=10201&amp;pl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0_0001841241&amp;clID=10201&amp;plD=10200</a>
		내일신문	“노동시장 구조적 성차별 해소해야”	<a h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0848">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0848</a>
		한국경제TV	국민 71% “젠더갈등 심각”...향후 전망도 비관적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4200247&amp;t=NN">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4200247&amp;t=NN</a>

		한겨레	"청년 여성, '구조적 성차별' 증명해야 하는 상황 놓였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9751.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9751.html</a>
		프레시안	한국인 절반 '尹정부 양성평등 실패' 전망...20대 女85%는 '잘못할 것'	<a h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201619576362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2016195763629</a>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4.23	여성신문	[여성논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이 높아진다면	문유경 원장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75">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75</a>
4.11	뉴스1	[세상을 바꾼 법정] ①"남자니까 월급 더 준다"...어떻게 '위법' 됐나	구미영 연구위원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640517">https://www.news1.kr/articles/?4640517</a>
4.19	연합뉴스	"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가사·돌봄 여전히 '여성 몫'(종합)"	마경희 연구위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47451530?did=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47451530?did=1195m</a>
	여성신문	"구조적 성차별 있다"는 20대 여성 73.4%... 20대 남성은 29.2%뿐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90">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90</a>
	서울경제	"한국사회 남녀 불평등하다" 20대女 73% 20대男 29%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64R6X7Y54">https://www.sedaily.com/NewsView/264R6X7Y54</a>
	헤럴드경제	20대女 73% "한국, 여성에 불평등"...女 돌봄부담 69%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190000571">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190000571</a>
	세계일보	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 '女 독박 육아' 문제 여전		<a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9510145">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9510145</a>
	mbn	"한국사회, 여성에 불평등"...이대녀 73% vs 이대남 29%		<a href="https://www.mbn.co.kr/news/society/4743085">https://www.mbn.co.kr/news/society/4743085</a>
	국민일보	"한국사회, 여성에 불평등" 이대녀 73% vs 이대남 29%		<a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90020&amp;code=61121111&amp;cp=nv">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90020&amp;code=61121111&amp;cp=nv</a>
	중앙일보	이대남 불만에도 "사회가 남성에 불평등" 5년 새 확 줄어든 이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61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613</a>
	뉴스1	女 92% 男 79% "여성 폭력 심각"... 20대미만 男은 70% 미만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653553">https://www.news1.kr/articles/?4653553</a>
	동아일보	"한국사회 여성에 불평등" 20대女 73%...20대男은 29%뿐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9/112970063/1">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9/112970063/1</a>
	뉴스is	이대남 24% "한국, 남성에 불평등"...5년전 35%대비 감소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9_0001839712&amp;clD=10201&amp;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9_0001839712&amp;clD=10201&amp;pID=10200</a>
	YTN	"생계는 남성, 양육은 여성이?" 성 역할 고정관념 크게 줄었다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204191944597867">https://www.ytn.co.kr/_ln/0103_202204191944597867</a>
	KBS	코로나19에도 가사·돌봄 여전히 '여성 몫'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4068&amp;ref=A">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4068&amp;ref=A</a>
4.19	서울신문	"웬만하면 아빠 성 따르는 게 편해"... 여전히 장벽 높은 '엄마 성 물려주기'	송효진 연구위원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9500175">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9500175</a>
4.20	연합뉴스	제정 1년 스톱킹처벌법...시행 6개월간 하루 90건꼴 신고	김정혜 부연구위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1483000004?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1483000004?input=1195m</a>
4.22	뉴스is	스톱킹처벌법 제정1년·시행 6개월...하루 평균 97건 신고, '사각지대는 여전'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1_0001842454&amp;clD=10201&amp;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1_0001842454&amp;clD=10201&amp;pID=10200</a>



##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19 위기로 현 사회안전망의 포괄성 및 위기 대응성의 한계가 드러난 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

### 참고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2022.04.21.]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491&pg=1&pp=10&mcd=001002001](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491&pg=1&pp=10&mcd=001002001)

##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지원과 근로자 고용 개선방안(서울연구원)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맞벌이 가구 증가 이후 가사서비스 시장 변화에 따른 가사서비스에 대한 정책 개선사항 발굴 제안

### 참고자료

-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4.22.]  
<https://www.si.re.kr/node/65913>